영자팔법과 대한민국 재창조

〈永字八法〉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컬처엔지니어

42년 전인 1981년 송천(松泉) 정하건(鄭夏建) 선생의 인사동 서실로 붓글씨를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다. 송천 선생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서예 선생으로도 이름이 높았다는데 당시 대학 초년생이었던 나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당시 서실에는 젊은이가 드물었고 게다가 남학생은 나뿐이어서인지 송천 선생은 나를 각별하게 대해주시고 당신이 직접 쓰신 체본을 남보다 자주 내려주셔서 그걸 보고 반복해서 연습하며 쓰도록 하셨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체본의 첫 단계는 길 '영(永)' 자 한 글자였다. 그 한 글자 안에 서예와 서도의 기본이 되는 여덟 획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른바 영자팔법(永字八法)이 그것이다.

옛사람들은 영자팔법과 관련해 적잖게 글들을 남겼는데 그중 당나라 시대의 명필 안진경(顔眞卿)의 영자팔법송이 특히 흥미롭다. "점은 측(側)이라 하는데 마치 웅크린 매가 떨어뜨리는 돌처럼 해야 하고, 가로 획인 늑(勒)은 천천히 기민함을 감추어야 하며, 세로 획인 노(努)는 이슬이 내리는 듯 기세를 완곡하게 하며, 갈고리처럼 생긴 적(趯)은 빠르게 송곳처럼 하며…." 한마디로 '길고 오래 영원히 언제까지나'의 의미가 담긴 '영(永)' 자 한 글자를 쓰는 과정과 방법에 삼라만상의 움직임과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하니 예부터 인물을 선택하는 데 기준으로 삼던 조건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 중에 '서(書)'가 든 까닭이 짐작이 간다.

그러나 요즘에야 어디 여간해선 '서(書)'를 쓸 일도 볼 일도 드물다. 기껏해야 방명록에 글을 쓸 때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남긴 서(書)를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의 것보다 단정하고 반듯하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도 말들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서명 아래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전의 다른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 이름 아래 함께 이름을 올린 적이 없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만의 단정하고 반듯한 서(書)가 돋보이도록 대통령 배우자의 서명은 생략했더라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다.

그제 어느 모임에서 내 옆에 앉은 이름 대면 알 만한 보수 유튜버와 이런 얘기가 오갔다. "이번에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렇게 유창하고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영어 연설을 하다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훌륭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왜 이전의 나토나 G20 같은 다자 간 모임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났을 때는 그저 웃고만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자 함께 자리했던, 역시 보수적인 성향의 모 교수는 자신이 영국에

김성규

민심에 귀 열고
성심껏 조심스레
한 획 두 획 그으며
미래로 갑시다!

서 유학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건 듣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듯 말했다. 네이티브 스피커 뺨칠 정도로 유창한 영어 연설이 가능해도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듣기가 안 돼 일대일 소통은 어렵지만 다중을 앞에 놓고 농담까지 섞어가며 연설하는 것은 연습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구사한 발음과 억양, 그리고 제스처는 며칠 연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다져온 것이란 생각은 양보할 수 없었다.

물론 그 교수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영어 듣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갑론을박 따지며 거론할 문제가 못 된다. 오히려 진짜 짚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영어 듣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민심 듣기' 능력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 언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대로 듣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있었던 말들이다. 물론 대통령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의 귀가 닫혀 있다면 왜 그런지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일이지 듣지 않는다고 힐난만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꼭 30년 전 청와대 시절 2년 정도 수석회의에 참석해 본 필자의 경험에서 유추해볼 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일 년만 앉아 있으면 세상만사를 모두 꿰뚫을 만큼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기 마련이다. 장관이나 수석은 자기 분야에 국한되고 심지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정보마저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고 접할 수 있기에 정보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대통령을 넘어설 이는 주변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윤 대통령처럼 정보 소화력이 대단한 사람인 경우에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아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 대통령 나름의 판단이 서버린 경우 또한 허다할 것이다. 그래서 회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의 말하고 지시를 하며 대통령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책까지 내놓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집권 1년 차의 '전지전능의 함정(올마이티 트랩)'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사람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라고들 한다. 여염집에서는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안정되고 일이 잘 풀린다. 하지만, 국가는 대통령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잘되고 잘 풀릴 수 있다. 국민이 하늘이고, 길잡이며, 곧 부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간다. 정확하게 일주일 후면 취임 1주년이다. 대통령이 국민 저변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기 바란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던 영자팔법의 획 긋는 방법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 대한민국 재창조의 한 획, 한 획을 조심하고 성찰하며 정성을 다해 그어나가길 바란다.

社說

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 중 7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여 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이 타격 입고 주택·코인 등의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유행하면서 개인 빚이 급증했다. 작년 이후 금리 급등 악재가 겹치자 버티지 못하고 빚을 연체하는 한계 대출자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급전을 빌려 쓰는 대부업체 연체율은 이미 10%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의 5%를 넘어섰다. 7개 신용카드사 연체액도 1조원을 넘어섰고, 카드 결제 대금을 쪼개서 갚는 리볼빙 결제 신청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대출금 연체가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자 KB금융은 1분기 중 작년보다 4배 많은 6682억원을 손실 대비 충당금으로 쌓았다. 4대 금융그룹의 1분기 충당금은 1조73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배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자영업자 57만명의 빚 141조원을 또다시 3년간 만기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부채 시한폭탄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가계의 신용위험도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이후 3년간 2030세대의 빚이 110조원이나 늘어나 514조원에 달한다. 2030세대의 파산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년 전 카드 대란 당시 성인 7명 중 1명꼴인 370만명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다. 그 여파로 이혼, 자살과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빚어졌다.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파산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제2의 카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민주노총이 2003년 이후 단체 명의로 북한을 114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101회나 방북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 대부분 평양 방문이었다. 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간첩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빈번했던 방북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노총과 통진당 인사들의 방북은 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다. 민노총은 노 정부 시절 87회, 문 정부 때 5회 북한을 다녀왔다. 통진당 방북도 노 정부 때 집중됐다. '남북 노동자 통일 대회' '6·15 남북공동선언 연대 모임' '남북 축구 대회' 등 명목이었다. 전세기까지 동원한 방북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행적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미·반정부 시위 지침을 받고 핼러윈 참사 땐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까지 전달받았다.

이들 중 핵심인 민노총 조직국장은 개인 자격으로만 3차례 방북했다. 민노총 단체 방북 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후 100여 차례 북한과 접촉해 대남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미군 정찰기, 패트리엇 포대, LNG 저장시설 등을 촬영해 북한에 보고했다. 그 역시 수차례 방북 때 북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진당을 이끈 이석기 전 의원은 2005년 등 두 차례 방북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석방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사범이 형기 중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노무현 정부가 허가한 것이다. 이런 무차별 방북이 통진당의 세력 확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좌파 정당과 단체, 노조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에서 한편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방북 때 누구를 접촉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 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커녕 서면 경고뿐이다. 민노총을 비롯해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에 지하 간첩 조직이 판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동영상 사설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수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지난해 임원들 연봉이 평균 30%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 사장은 43% 오른 2억여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획재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덕분이다. 기업이 거액 빚더미에 오르고 난방비가 올라 소비자들은 고통받는데 기재부는 이들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주라고 판정한 것이다.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도 역시 성과급 지급 대상 판정을 받았다. 성과급을 받아 챙긴 가스공사 경영진의 얼굴도 두껍지만 경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방식이 더 문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2018년 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바꾼 탓이 크다. 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약자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11점에서 25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반면 10점이었던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부채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고도 '상생협력·지역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단계 등급 중 넷째인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전 역시 7조원 넘는 영업 적자를 내고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 대상이 됐다. 성과급에 목을 맨 공기업 임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 정부 내내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 골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공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500조원 규모였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670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기업에 사기업처럼 이윤 추구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문 정부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새 정부 들어 평가 항목에서 재무 비중을 대폭 늘리고,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긴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가스공사처럼 정권에 영합해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어이없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5

"하버드大 연설, 철학적·가치론적이었다…
우남 이승만 이후 처음"

"자유의 세력, 연대와 용기로 단호히 투쟁해야" 역설
'자유의 적'과 '내부의 사이비' 동시 저격

■ '이념의 시대'는 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 연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로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철학적이고 가치론적'인 연설이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비(非)좌파 정치·경제 진영에는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젠 실용의 시대다"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누군들 '중도·실용'이란 단어 자체를 배척할 것인가? 문제는 그 '중도'가 진정한 의미의 중용을 제대로 살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실용'을 마치 "철학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투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아니다.

그런 속류 '사이비 중도·실용'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력이야말로 근대문명을 이끌어 온 철학적 사유(思惟)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다.

■ 공정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 연설은 이 점을 적실(適實)하게 짚었다.

그는
△ 중세기적 몽매(蒙昧)에 대한 저항
△ 계몽사상의 대두
△ 미국 청교도들의 독립혁명 사상을 조명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 흐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 고전적 자유가, 트러스트(trust)란 이름의 독과점을 낳았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정'의 가치, 이를 담보하는 '법의 지배'였다는 것도 그는 지적했다.

이 '승화된 자유'의 이념이 한반도에서 처음 구현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었다.

■ 자유·공정·법의 지배 vs 전체주의·거짓선동·가짜뉴스 음모

하버드 대학 졸업생 18명도 6.25 남침 때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사했다.

그중 한 명,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유가족이 연설 현장에 있었다.

오늘의 세계와 한국에서
△ 자유 △ 공정 △ 법의 지배는 ▲ 전체주의 ▲ 거짓선동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의 세력은 연대와 용기로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했다.

■ '자유 없는 철학', '철학 없는 자유' vs '자유의 철학'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 연설은 '자유의 적(敵)'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부의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일격이 되어 마땅하다.

주사파 등 [자유 없는 철학]은 독단(獨斷)이고, 국민의 힘 일각의 [철학 없는 자유]는 비속(卑俗)하다.

자유의 철학
자유 레지스탕스로 가자!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관련기사 보기

① 막말하는 中 외교부…그런데도 中共편 드는 야당 친중운동권

② "한·미정상, '문재인식 반동' 용납불가 선언하라"

③ '한미동맹 2.0' 개막…재래식서 '한국형핵억제·우주·사이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④ 윤대통령, '한미동맹2.0' 열었다… 北대변인 노릇 문재인류(流) 훼방 뚫고

⑥ 방미외교 폄훼 거짓선동·가짜뉴스 폭주… "악랄·뻔뻔하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4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27 Advertisement-type Article Series 광고형 기사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